

# 주요 정책의 쟁점

(1997. 10. 18~11. 20)

일자	정책	주된 내용	수긍 의견	보완 의견
10.22	기아자동차 처리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정 관리 신청 후 산업은행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정상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조 및 사회 단체의 반발을 무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작사인 포드社의 지분 처리 문제가 불투명</li> </ul>
10.26	전문경영인 체제의 국민 기업으로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경영인 체제의 국민 기업으로 육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제 위기 아래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전히 제3자 인수의 가능성이 있음</li> </ul>
10.29	공산품리콜 제 확대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비자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400여 품목을 대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비자 보호 및 주권을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비자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조치 필요</li> </ul>
10.30	도시개발법 제정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제3섹터 및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 및 민간 기관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적인 도시 개발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간 참여의 유도를 위한 수익성 보장 방안이 필요</li> </ul>
11.4	산업 입지 종합 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재의 공장 설립, 창업 계획, 사업 계획 등 3단계 절차에서 일원화</li> <li>산업단지 개발에 저리의 외자 도입 허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장 설립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</li> <li>공단 토지 가격의 하락이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단용 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근본 대책 필요</li> <li>지방 공단 조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요구</li> </ul>
11.7	지방 중소기업 육성 자금 기본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 기업 전용 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에 대해 입주 자금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업체당 한도액을 5,000만 원에서 확대할 필요</li> <li>입주 자금과 별도의 지원 대책이 추가 필요</li> </ul>
11.11	1998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, 금융, 복지 부문에 총 14조 4,500억 원을 투자</li> <li>수익률이 높은 채권 매입 비중을 높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금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춤</li> <li>연금 재정 고갈 속도를 최대한 늦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문가 부재로 주먹구구식 운용이 계속</li> <li>정부의 이해와 경제 현실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이 변질될 가능성</li> </ul>
11.19	금융 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화 환율 1일 변동폭을 상하 10%로 확대</li> <li>부실채권 정리 기금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</li> <li>부실 금융 기관은 강제 합병하거나 3자 인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실채권 및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조기 정리가 가능</li> <li>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금 차관 허용 및 기업의 무역 금융 확대가 필요</li> <li>금융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없는 대책의 효과가 의문</li> </ul>